

여야 출구 없는 ‘드루킹 대치’

여 “드루킹 사무실 태블릿 절도, 한국당·TV조선 공모”

한국당·바른미래당 간담회… “특검에 검경 관계자도 포함”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의 ‘드루킹 특검’(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특검) 공조에 대해 사실상 ‘대선불복’으로 규정하고 총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자유한국당이 특정 인물은 물론 경찰과도 모종의 커넥션을 갖고 있다고 비난하며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TV조선의 한 기자가 드루킹이 운영한 출판사에서 태블릿PC 등을 가져간 사건과 관련, “한국당과 해당 종편은 범죄자료를 공유하며 의혹을 부풀렸다”며 “이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한국당·TV조선·경찰의) 삼각동맹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한국당과 TV조선의 불법 수사개입과 방송조작 사건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경찰은 방송사의 범죄행위에 (한국당과의) 사전교감에 의한 기획 의도가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일각에선 한국당과 TV조선, 경찰이

정보를 공유하며 드루킹 사건을 특검수사로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박법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KBS ‘일요토론’에 출연해 TV조선과의 수사정보 공유 사실을 공개적으로 실했다”며 “경찰 일부, TV조선, 한국당이 이번 댓글조작 공세에 일종의 커넥션을 갖고 공모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백해련 대변인은도 논평을 내고 “김경수 의원을 회생양심아 누군가가 기획한 각본대로 이 사건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누군가 ‘빅 픽처’를 그렸다면 이는 저열한 정치협업이자 범죄주의를 무너뜨리는 파렴치하고 중대한 범죄”라고 가세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 및 국정조사 공조’에 나선 데 이어 대야 공세에도 손을 잡았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인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드루킹 불법 여론조작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긴급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정 의원은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의 대선 불법 선거운동이 확인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청와대와 검찰·경찰의 사건 은폐가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질지 답을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포털이 이런 것(댓글조작)을 알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다면 포털의 미필적 묵인도 수사해야 한다”고 “이렇듯 광범위한 사건을 정권의 영향을 받는 검경에 맡길 수 없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드루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부실 수사이자 (사건을) 덮은 것”이라며 “특검을 하면 수사 대상에는 당시 무혐의 처분한 검경 관계자들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당 김학용·주호영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정운천·하태경·김종로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나란히 자리해 드루킹 사태에 있어 공조 의지를 드러냈다. /박지경기자 jkpark@



문대통령 “개헌 무산 유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배숙 “安, 비례대표 3인 출당하라”

평화당 지도부, 바른미래당 항의 방문

민주평화당 지도부는 24일 실질적 활동은 평화당에 하면서도 ‘탈당 시 의원직 상실’ 규정 때문에 바른미래당에 발이 묶인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 3명을 출당 조치해 달라고 바른미래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정인화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박주현·이상준·장정숙 의원 등 3명의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출당요청

서를 들고 국회 본관에 있는 바른미래당 대표실을 항의 방문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박주현·유승민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자리를 비워 만나지는 못했다.

조 대표는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방문 일정을 얘기했는데도 입장이 곤란하니 피하는 것 같다”며 “안철수의 말 바꾸기 정치와 바른미래당의 행태에 분노한

다”고 항의했다.

조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는 과거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나올 때 비례대표 도의원을 출당시켜 국민의당에 합류시켰고, 박주현 대표는 합당·분당 시 비례대표 의원의 자유로운 당적 선택을 허용하는 법안을 허용한 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승민 대표도 합당 시 비례대표를 자유롭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음에도, 세분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 3명의 출당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열흘 넘게 단식농성 중인 평화당 당원을 만나 단식 종단을 설득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6·13 선거 현장

구청장 후보

임택 “지자체, 재활용쓰레기 처리 개선 나서야”

강수훈, 광주 예비후보 첫 ‘정치인 펀드’ 출시



임택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24일 “최근 불거진 재활용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재활용 시스템 체질 개선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을 공지한 것은 지난해 7월이며,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대란을 막지 못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하지만 재활용 문제는 국가 정책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장기적인 투자와 체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또 “자원 순환을 위한 지역사회의 재활용 시스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보현 “주민자치커뮤니티 센터 건립 추진”



김보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24일 “서구민이 주인이 되는 구정을 함께하기 위해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구도심 중심으로 진행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주민자치활동 지원센터를 집중 건립해 구도심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활력 회복을 최우선시 하겠다”면서 “주민자치 커뮤니티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 사회적 기업, 마을만들기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도시재생과 더불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내 “재래시장 시설개선·경영 지원”



김병내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24일 남구 봉선시장을 찾아 봉선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및 경영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마다 특화된 콘텐츠의 중요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자”면서 “청년상인 창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형마트 등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고객맞춤형 배송서비스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단순한 거래 장소인 마켓의 관점이 아닌,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바라보고 그 가치를 복원하는데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자”고 덧붙였다.



강수훈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가 광주지역 지방선거 예비후보들 중 처음으로 ‘정치인 펀드’를 출시했다.

강수훈 예비후보가 개설한 ‘정치인 펀드’는 선거 자금을 시민들에게 빌려 쓰고 선거 종료 후 해당 비용을 보전 받아 다시 되돌려 주는 모금 형식이다. ‘강수훈 펀드’는 총 3500만원 모금을 목표로 최소 1만원부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수훈 예비후보의 공식 블로그(www.kangsuhoon.com) 신청 페이지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 후 펀드 계좌에 입금을 하면 펀드 마감 후 일괄적으로 차용증을 받는다. 펀드는 목표액 달성 시 마감되며, 펀드마감일로부터 상환 날짜인 8월 31일 까지 연이율 3.0%를 일괄 계산(이자 세금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 상환된다.

김영남 “양동·서부시장 관광명소 개발”



김영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24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유흥시장 개방 및 대형마트와 홈쇼핑 등 소비 형태의 변화에 밀려 상권이 위축을 받고 있는데 골목 상권에 대한 지원책이 있지만 골목활성화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안전시설 확충 및 기반시설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양동시장과 서부시장을 지역문화·관광자원과 전통시장을 연계하는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는 시장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인 “금융소외층 위한 지원체계 운영”



문인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24일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재활복지 지원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일자리 정책 일환으로 창업을 권장하고 있지만 자영업 창업을 하려 해도 저소득자, 저신용자 등을 이유로 필요한 자금 마련에 막혀 시작도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이 많다”며 “서민금융진흥원 상인이사 재직시절 경험을 살려 실질적인 금융소외계층의 재활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종합 상담 후 재무조정, 서민금융상담 알선, 교육, 취업 등이 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서민이 잘 살 수 있는 북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시끌’

문상필, 조사과정 불공정 이의 제기

조오섭·조사기관 “허위사실 유포”

문상필·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가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문 후보가 여론조사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조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 수용을 촉구했으며, 조사를 진행한 국내 여론조사 기관도 문 후보의 주장을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조 후보는 24일 단일화 여론조사 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문상

필 후보에게 여론조사결과 수용을 촉구했다. 조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함께하겠다는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와 줄 것을 문상필 후보에게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 후보가 불공정 여론조사 기관으로 지적한 업체도 성명을 내고 “여론조사 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규정을 지켰다”며 “샘플 수가 미도달했다는 문상필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여론조사는 각자 합의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나주, 2층 주택, 급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 1000만원~~
- 급매 - 5200만원
- H. 010-6838-1230

